北미사일 발사
북한 의도 뭔가

美 직접대화 끌어내려 벼랑끝 초강수

대포동 2호 계산된 발사 실패 가능성
미사일 구매국가에 기술과시 목적도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 한국시각 7월 5일)에 맞춰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그 의도와 시점, 여러 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한 점, '대포동 2호' 실패 배경 등 '북 미사일 미스터리'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이번 행동은 자신들의 존재를 재인식시키는 등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어내 6자회담에서 자기 주장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제무기전문가 조지프 시린시온은 미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오늘이 미국의 국경일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싶어한다"고 이날 발사가 이뤄진 배경을 분석했다.

특히 발사시점을 미국의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 발사에 맞춘 것은 미국을 양자 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북한이 대포동 2호와 노동 미사일 등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각각 발사, 남한·일본·미국에 각각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각인시켜 충격을 극대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이 정치적인 속셈과 함께 무기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성능이 향상된 미사일을 시험해보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포동 2호 미사일의 발사 실패도 기술력 부족 이라기 보다는 의도된 계산이 깔려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패는 의도된 실험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북측 입장에서는 대포동 2호의 기술력을 모두 보여주지 않고라도 발사 자체 만으로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이번에도 통할 수 있을 까 하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북한은 90년대 들어 핵 문제 등으로 미국과 협상에 나서기 시작한 이래 크고 작은 협상에서 벼랑끝 전술을 즐겨 사용해 재미를 봤다.

지속되는 경제난, 국제사회의 고립 등으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판사판식의 벼랑끝 전술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 해 '2·10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무기한 불참을 전격 선언, 벼랑끝 전술로 핵문제를 일괄타결하려는 의도를 관철시켰다. 북한은 이어 3월2일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조치 철회의사를 천명하고 5월에는 영변 5MW급 원자로 가동 중단, 원자로 폐연료봉 인출작업 완료를 발표하는 한편, 핵실험설을 흘리면서 긴장의 파고를 한층 높여갔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향으로 사태를 매듭지었다.

이에 앞서 2002년 10월 제2차 핵위기가 불거지고 미국 주도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11월 대북 중유지원을 중단하자 북한은 이듬해 1월 '정부 성명'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다고 전격 선언, 다시 벼랑끝 전술에 매달렸다.

이같은 결과로 북한은 대북 강경정책을 펴고 있는 부시 행정부에게도 벼랑끝 전술이 먹힌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졌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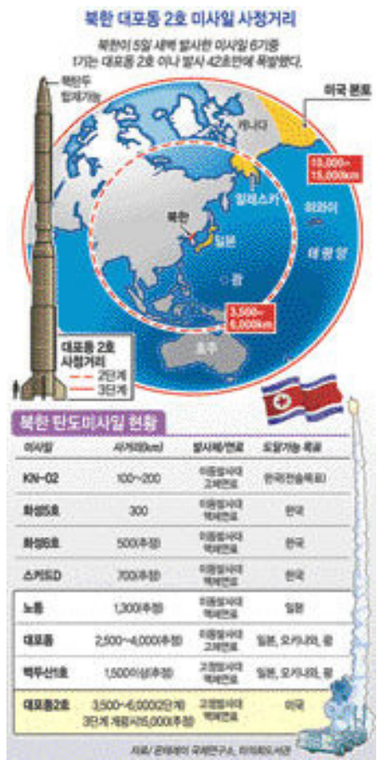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협상의지가 있을 때에는 벼랑끝 전술이 먹혀 양보안이 나오고 긍정적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만 미국이 협상보다는 밀어붙이기 전술을 구사하는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진의가 아무리 대미 협상에 의지를 두고 있다고 해도 미국을 협상장으로 이끌어 내기는 커녕 대북 제재를 가져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이득을 봤지만 그나마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는 국가의 입지를 좁혔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외교활동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발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자국 주재 북한대사를 초치해 우려를 전달하는 비교적 강한 조치를 취한 상태여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게임이 될 전망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5일 오후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주 남북장관급회담 불투명

정부, 대화의 끈 놓을수도…강수 검토

■남북관계 파장

북한이 5일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남북관계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쌀과 비료의 대북 추가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는 한편 오는 11~14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의 개최 여부도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이관세 정책홍보실장은 5일 장관급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두달 여 전 열린 18차 회담에서 일정이 확정되고 이번 주 들어서도 연락관 접촉을 통해 세부 일정을 논의하던 남북간 회담에 대해 '심사숙고'에 들어갔다는 점만으로도 연기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남북관계에서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가 먼저 남북회담의 연기를 요청한 적은 없었다.

정부가 장관급회담 연기를 결정한다면 이는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및 북핵문제 해결의 기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현재 일정이 확정된 유일한 남북 고위급 회담인 장관급회담 일정까지 연기할 것을 검토하며 '대화의 끈을 놓을 수도 있다'는 강수를 고려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부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지난달 말 진행될 예정이던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행사를 하루 앞두고 북측의 일방적 통보로 무산된 데 이어 북한이 결국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내 대북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점도 감안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대포동2호와 함께 우리에게 직접 위협이 될 수 있는 단거리미사일도 이날 함께 발사한 것도 대북 여론 악화에 한 몫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대화 노력을 기울여 왔던 중국도 북한에 대해 비판적으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되는 등 국제사회의 부정적 기류도 염두에 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사일 발사 위기 초기부터 강경대응해 온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대화 노력을 기울여 온 중국마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6자회담 복귀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고 촉구한 마당에 스스로 남북 간 대화의 판을 엎어버리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부담도 따른다.

따라서 북한과 이번 문제를 대화로 풀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당사자가 우리 정부이며 이미 마련돼 있는 대화의 통로가 19차 장관급회담인 만큼 예정대로 만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우리 정부가 장관급회담을 연기한다면 남북관계는 장기간 경색국면으로 치 달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안보리 통한 '北고립·제재'

도발 행위 강경 대응…양자 접촉 거부

■美 대응 시나리오

북한이 미일 양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 5일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일단 미국의 입장은 아주 강경한 편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직후 국가안보회의(NSC)가 긴급 소집됐고,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됐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도발적 행위'로 간주했고, 조만간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로선 부시 행정부가 선제공격을 포함, 북한에 대해 강경한 정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직접 대화 등 유화적인 정책을 취할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 외교소식통들은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유도하는 두가지 방안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매파 중 매파'로 분류되는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5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비공식 협의에 나서는 등 분주하게 움직인 것도 이런 흐름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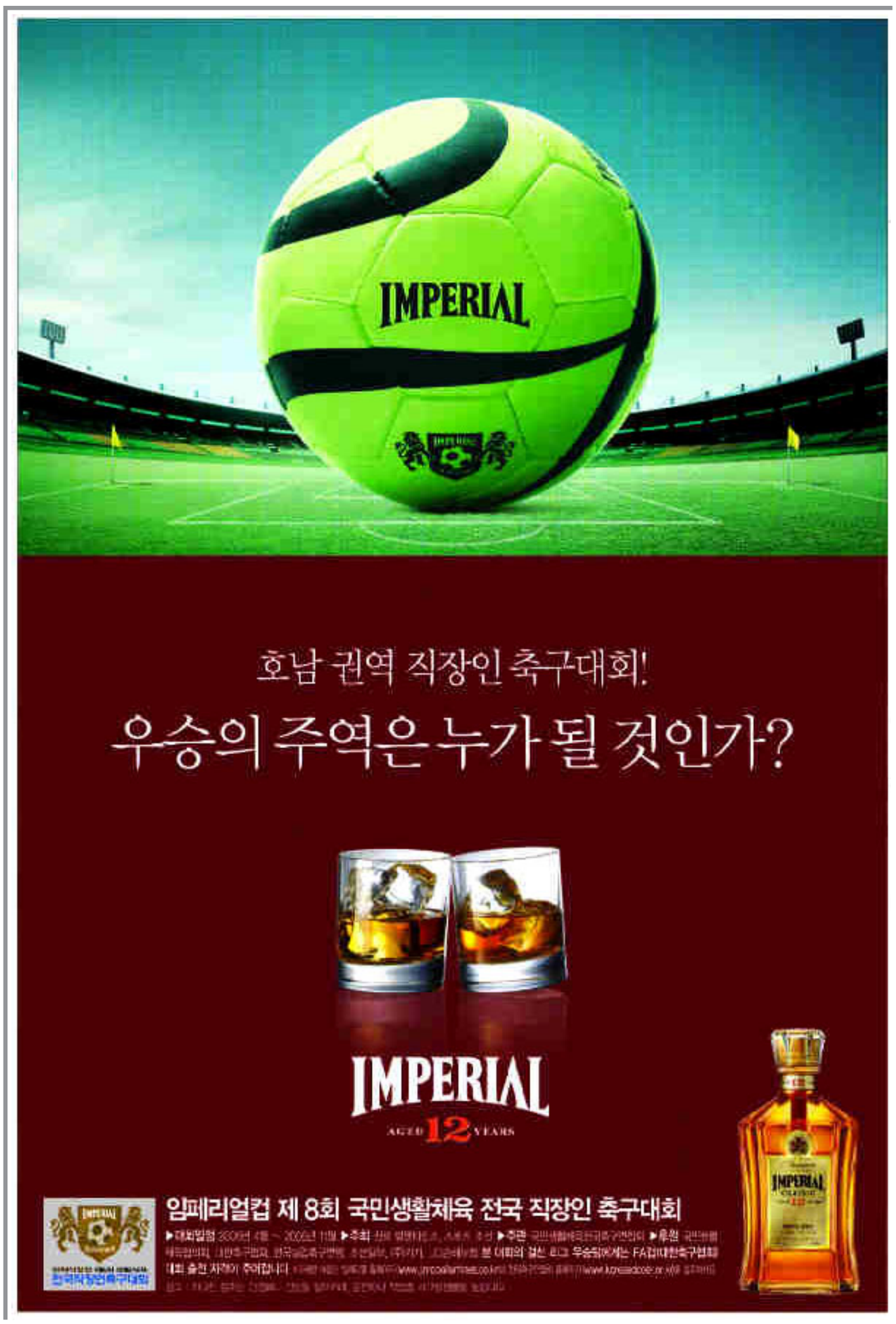
미국이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긴급 협의에 착수한 것은 고강도 대북 제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때문에 부시 행정부가 당장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간 양자 접촉에는 일단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이런 관측은 "북한의 미사일 위기가 기본적으로 북핵을 둘러싼 교착상태 타개를 위한 북한측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미 정부의 판단도 한 몫하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샌더 버거는 이날 CNN 인터뷰에서 "이미 6자회담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북한과 직접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쨌거나 부시 행정부는 일본, 중국, 한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과 적극적인 외교적 해결책 모색을 병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양자 접촉 거부'라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불신이 안팎에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어느정도 감안할 수 밖에 없는 탓이다.

미 상원은 지난달 22일 대통령 특사를 임명,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목을 끈 바 있다.

이런 기류를 감안할 때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인 크리스토퍼 힐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5일쯤 6자회담 당사국 방문에 나서기로 한 것은 미국 정치권의 부정적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워싱턴=연합뉴스